투데이 칼럼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곽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몇 일전 조국 후보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제기된 의혹의 대부분은 근거가 미약하거나 왜곡으로 부풀려져 있고, 특히 일부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의 경우 그들이 보여 온 과거 행태와 비교할 때 의혹제기를 넘어 정치적 공세라는 이름으로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

먼저 언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언론의 편향 문제는 '왜 좌파/개혁성향에게만 유독 가혹하냐' 보다는 '왜 우파/극우에게만 설설 기는가'로 짚는 게 맞을 것 같다. 언론이 화제의 인물과 그 가족들에게 탐침을 들이미는 건 좌우 진영 모두에게 같다.

그러나 좌파/개혁성향에겐 의혹단계에서부터 낱알 고르듯 바닥을 샅샅이 훑는 반면, 우파/극우에겐 일정 정도의 혐의가 여실히 밝혀지는 단계가 되어서야 겨우 표면적으로 비슷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건 넓게 이해해줘도 편향이며, 거칠게 말하면 '쫄았냐?'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잘 무는 미친개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정보화산업 시대에 언론 매체의 성격은 화제를 발굴하고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안을 키워내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쪽으로 점차 정리돼가고 있다. 그것이 정보화 시대가 통과해야 할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면, 언론은 어느 진영에게든 똑같은 행위를 하는 정도의 직업정신은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름의 공평함이라도 확보 할 수 있다.

두 번째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2019년 판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로 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시그널은 분명하다.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의 메시지다. 조국 장관은 안 된다는 메시지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독립'과 '검찰 중립'을 말하며 환호한다고 한다. 누구도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 게 독립이고 중립인가?

또한 현재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대검 중수부를 해체하고자 하셨을 때와 아주 비슷한 궤적이 보이는 듯하다. 당시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대선자금 수사 이후 대검 중수부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의 중수부 폐지에 강력히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송광수 총장의 임기는 끝까지 보장하는 원칙주의 행보를 고수했고 결국 중수부 폐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2013년이 되어서야 폐지됐다. 현재 중수부의 기능은 대검 반부패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이관돼 있다.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살펴보면, 그 때는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메시지를 통해 강하게 맞붙는 상황이었고 현재는 검찰 개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정권의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 이번의 문 대통령의 메세지는 과거 노 전 대통령 때와는 사뭇 다른데,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 총장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라는 식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질책을 피한, 다소 완곡한 메세지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몇 가지 면에서 절묘한 포인트들이 있다.

이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장관 후보자 본인의 신변을 다소 비껴간(자택이라든지 휴대전화라든지)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찌됐든 수사의 핵심 포인트로는 장관 후보자가 늘상 거론되고 있는 상당히 오묘한 상태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쉽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검찰을 질책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청와대가 메시지를 낼 명분이 생긴 것이다.

즉 이번 메시지는 "당신이 세간에 알려진 대로 정말 원칙주의자라면, 약속한 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옛날 하던 버릇대로 사소하게 저지르는 잘못들 눙칠 생각 하지 마라." 라는 뜻이다. 즉 과거처럼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만으로 인해 검찰에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던 일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도, 눈치만 안 보면 된다는 뜻은 아니잖은가? 여태껏 은근슬쩍 행해오던 각종 관행들까지 다 포기해야만 진정한 성역 없는 수사가 될 테니 말이다.

독자제언

술보다 무서운 운전중 스마트폰 사용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기능향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운전중 사용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해마다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평균 426명이 숨지거나 다친다고 한다. 국내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자동차가 정지 중인 경우나 긴급자동차 운전시, 범죄나 피해신고를 요청할 경우 등이 있다.

경찰이 연중 불시로 단속에 나서지만 경찰의 단순 경고, 계도조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태도로 화를 내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잠깐인데 뭐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찰나의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때와 장소에 맞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안전한 운전습관을 익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현진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한복 선보이는 북한 모델들

5일 평양의 청년 중앙회관에서 제17차 조선옷 전시회가 열려 한복을 차려입은 모델들이 무대를 걷고 있다.

사 설

군산형 일자리 추진에 힘 내야

군산형 일자리가 어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광주형 일자리 논의가 마무리 되면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줄 알았는데 말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을 본지도 오래 됐는데 여태 감감무소식이라 답답하다. 광주형 일자리가 마무리가 되면 군산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논의될 거라고 여당 대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말이다. 실직자들을 포함해 군산시민들은 하루 하루가 죽을 맛일 터이다. 전북도가 군산 살리기를 위해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혀야겠다.

전북을 위해서 전북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군산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지난날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조기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게 뚜렷한 대책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었다.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지원은 그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추진 행보가 뚜렷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잇따른 주력산업의 붕괴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군산 경제를 위해서이다. GM 군산 공장이 저번에 매각됐지만 새롭게 전기 지동차를 생산하려면 앞으로도 수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자세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규모를 확실하게 해두ㅇ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시민의 뜻에 부응해 군산 살리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군산의 경제 몰락 때문에 전북 전체의 경제가 함께 고통하고 있는 작금이니 말이다. 다시 강조해 당부하거니와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겠다. 한시적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래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날 군산 경제가 쓰러질 때 발만 동동거렸을 뿐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제 그처럼 무력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한 것이 있다.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계획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산과 구미와 대구가 구체적인 계획 대상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는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형 일자리 추진 행보가 뚜렷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잇따른 주력산업의 붕괴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은 군산 경제를 위해서이다. GM 군산 공장이 저번에 매각됐지만 새롭게 전기 지동차를 생산하려면 앞으로도 수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자세이다. 군산형 일자리의 규모를 확실하게 해두ㅇ터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시민의 뜻에 부응해 군산 살리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군산의 경제 몰락 때문에 전북 전체의 경제가 함께 고통하고 있는 작금이니 말이다. 다시 강조해 당부하거니와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겠다. 한시적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래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날 군산 경제가 쓰러질 때 발만 동동거렸을 뿐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제 그처럼 무력해서는 안 된다.

지난날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말한 것이 있다.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 계획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산과 구미와 대구가 구체적인 계획 대상이라고 했던 게 생각나는 것이다. 전북도는 그 발언의 행간을 심상하게 넘겨서는 안된다. 만약의 경우 구미나 대구 중 하나에 밀리게 된다면 군산시민들은 실망이 무지 클 것이라고 본보는 그때 지적한 바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제몫 찾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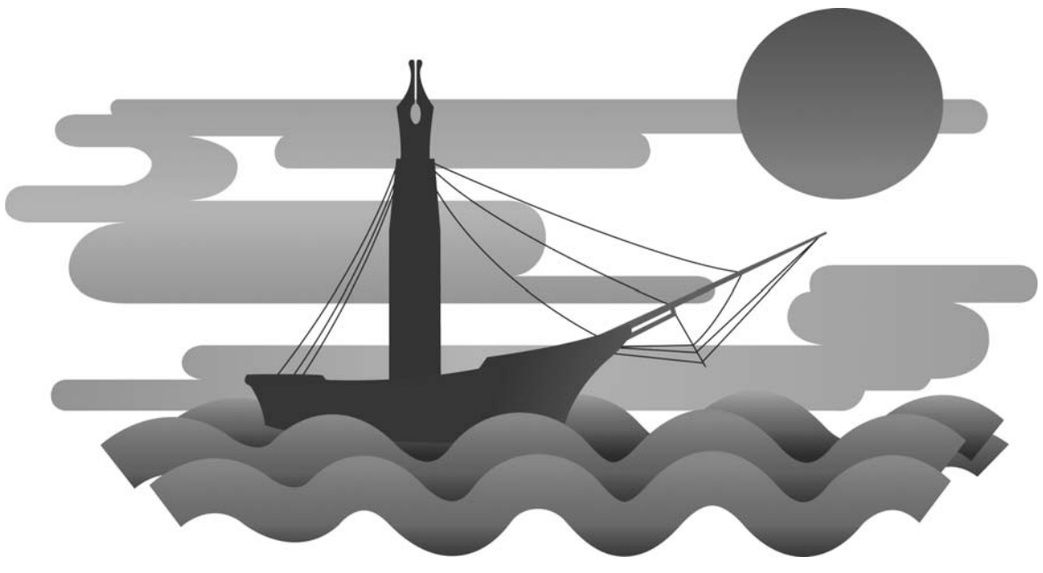
일자리 대책,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전북도는 일자리 대책을 보다 확실하게 강구해야겠다. 일자리 확보를 통해 청년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자리 대책 강구야말로 청년 인구의 감소를 막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침침하고 어둡다.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전국 밑바닥 수준인 까닭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 성과가 괜찮았다 식의 보고를 내고 있지만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심각하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도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데 고민의 폭이 넓어야겠다.

일자리 창출의 부족이며 고용률 저조며 부끄러운 기록들은 빨리 깨뜨릴수록 좋다. 정말이지 전북도와 각 시군은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지역의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둔하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고용 열기를 더 달구어야겠다. 오래 전부터 수차례 언급하고 지적도 했거니와 전북도는 도내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한데다 오히려 줄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은 허튼 것이 아니다.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북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전북도가 성과가 괜찮았다는 식으로 이따금 발표한 내용에 공감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계속 추구돼 마땅하다. 일자리가 적으면 일자리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 전북도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이제 정말로 달라진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